

중견기업 R&D 현황분석 및 향후 정책방향

안승구* · 김주일**

I. 서론

창업에서부터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갖추는 것은 국가경제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중소기업이 활발하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이들 중견기업이 건실하게 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전문기업,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하여야 고용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현장에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시, 정부의 금융·세제혜택 등 지원정책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장을 억제하고, 계속 중소기업으로 남으려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만연한 상황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이었을 때와 비교하여 중견기업이 되었을 때, ‘단점이 장점보다 크다’는 응답이 57.4%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장점이 단점보다 크다’는 응답은 9.9%에 그쳤다(대한상공회의소, 2014). 또한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가장 큰 부담은 세제지원(77.0%)으로 나타났고, 정책자금 지원(12.6%) 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의 기업 성장 사례에서도, 1980년 이후 창업한 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단 3개에 그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3). 따라서 중소기업과 차별화된 중견기업의 현황과 특수성, 경영애로에 대한 정교한 진단을 통해 기업 성장 시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견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변화한 것도 관련 정책 논의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단순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과정, 혹은 거쳐가는 성장단계 중 하나로 인식되던 중견기업은 최근 우리 경제에 만연한 ‘고용 없는 성장’ 추세 속에서 점차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성장모델을 채택하여 세계사에 유래 없는 속도로 고도성장했던 우리 경제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성장세가 완만해지며 본격적인 고용 없는 성장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고, 이는 경제의 허리를 차지하고 있는 중견기업의 위상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문적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이 고용창출은 물론, 국가 경제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데, 실제로, 2013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중견기업 수는 3,846개로 전체 기업의 0.12%에 불과하지만, 총 고용의 9.7%, 총 수출액의 15.7%라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중소기업청, 2014). 해외의 사례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크게 동요하지 않은 독일 경제의 저력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는데, 이는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으로 대표되는 기술 집약적 강소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고, 다시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적 노력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수와 예산에 비하여 중견기업 관련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일례로, 2011년 3월에 「산업발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중견기업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고, 조사분석 및 연구의 목적과 기술주체의 의도에 따라 다양하고 자의적인 정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일관된 정책적 방향성을 기대하기 힘들었다. 또한 2008~

* 안승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R&D예산정책실 연구위원, 02-589-2852, ask@kistep.re.kr

** 김주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R&D예산정책실 연구원, 02-589-3328, juil@kistep.re.kr

2013년 간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R&D 과제의 수혜현황을 조사한 결과, 중견기업의 수혜 건수는 벤처기업(10,323건), 중소기업(14,585건)과 큰 차이가 있는 195건으로 나타났다(국회예산정책처, 2014).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견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정부의 R&D 지원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Audretsch et al., 2002; Hall and Reenen, 2000; Almus and Czarnitski, 2003; Duch et al., 2005 등). 따라서 중견기업 고유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을 억제하고, 중견기업의 R&D 관련 정책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중견기업의 개념 및 현황에 대한 선행문헌 및 기존 데이터를 고찰하여 중소기업 및 대기업과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논의의 대상을 구체화하였다. 둘째, 중견기업의 실질적 경영환경, 특히 R&D 관련 현주소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기존 정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하여 검증하기 위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14년 12월 중 국내 제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일반적인 기업특성, 기업 R&D 역량 및 성과, R&D 관련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문헌고찰 및 설문조사 결과와 국내 정책 사례를 종합하여 중견기업 R&D 정책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중견기업의 개념

중견기업의 개념은 학술적·정책적 견지에서 상호 다르게 정의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경제 구조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특별법’)」에 의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닌 기업”이라는 일관된 정의를 채택하고 있다. 2011년 3월에 「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중견기업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정책적 견지에서 통일된 정의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단 및 연구자 별로 상이한 정의가 내려졌다. 하지만 「산업발전법」 개정과 이후 「중견기업특별법」이 제정 및 시행되면서 비로소 중견기업에 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중견기업특별법」에서 정의하는 중견기업의 개념은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과의 차이를 이해할 때, 보다 구체화될 수 있다. 즉,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한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이 아닌 기업이다. 또한 비영리법인, 금융·보험·연금업에 속하는 기업 등도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견기업의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중견기업특별법」 상의 정의에 입각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중견기업 R&D 관련 선행연구

중소기업 관련 연구가 다양한 주제에 걸쳐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중견기업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중견기업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경영지표 등 계량적 현황과 국내·외 기업 사례 등을 분석하여 이슈를 진단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강철구, 2009; 고성진·김갑수, 2009; 김군수·이상훈, 2013; 김병순, 2011; 김현중, 2009; 노창호, 2013; 박병

춘, 2013; 박찬수, 2012; 유승균·홍승기, 2014; 이학노·최혁준, 2013; 조영삼, 2009; 서경란, 2014; 유승균·박문서, 2010 등). 계량경제학적 통계 모형을 구축하여 실증적 가설검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형태의 연구는 사회과학부문에서 매우 보편화되어 있지만, 중견기업 관련 연구에서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박청원, 2013; 현용수 외, 2013 등).

상기 연구들 중에서도 특히 R&D 분야에 초점을 맞춘 중견기업 연구들을 살펴보면, 고성진·김갑수(2009)는 국내 중견기업의 R&D투자 부진과 중견기업 수 감소 등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주력제품시장, 하도급구조, 주력제품특성, 내부역량, 혁신환경 등에 대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투자유인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김현중(2009)은 중견기업의 R&D 실태에 관한 계량적 지표를 분석하여 혁신특성에 적합한 지원체계 구축,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기업 특성에 적합한 전문화 유도, 개방형 혁신체제 구축 및 확산, 사업화·상용화 지향적 R&D 촉진, 혁신지원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박병춘(2013)은 2013년에 발표된 중견기업 육성에 관한 다양한 제도 및 정책의 내용과 경과를 살펴보고, 중소·중견기업 R&D 투자 현황을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이론적 틀 및 비전체계 정립, 법적·제도적 환경 정비, 수요자 중심의 R&D 지원 체계 개편, 실효성 있는 R&D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을 강조하였다. 유승균·홍승기(2014)는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의 중견기업 현황과 성장전략 및 지원정책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중견기업 성장에 있어서 R&D지원 강화, 맞춤형 세제 및 금융 혁신 지원체계 구축, 기업 특성에 적합한 전문화 유도 등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학노·최혁준(2013)은 한국과 독일의 중견기업 현황 및 제도에 관한 고찰을 바탕으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히 성장하기 위한 8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중견기업의 범위 재고려, R&D 지원 강화, 수출제품 브랜드 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 법제화, 시장 선도형 전문업종 육성, 업종별 차별화 지원정책 마련, 마케팅·브랜드·유통 등 기능적 차별화, 서비스 분야의 중견기업을 위한 R&D 지원, 해외 주요국 중견기업 정책 및 사례 벤치마킹 등을 제안하였다.

중견기업 성과의 영향요인에 대하여 계량경제학적 통계모형을 적용한 실증분석 연구로서, 현용수 외(2013)는 중견기업의 자체 R&D 투자와 산학연지원, 외국기술도입이 기술성과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자체 R&D 투자와 외국기술도입은 기술성과에 있어서 긍정적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박청원(2013)은 산업발전법 상의 중견기업 1,307개를 대상으로 최근 10년 간의 재무제표, R&D, 수출 등 데이터를 추출하여 시계열데이터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규모 및 업력, 산업의 수익성·성장률·특성·외부적 환경 등이 경영성과의 영향요인임을 규명하였고, R&D집약도와 특허출원이 주요한 기술혁신활동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중견기업 R&D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고성진·김갑수, 2009), 연구자의 의도에 의한 설문조사의 설계와 실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계량적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중견기업특별법」시행 이후 현재까지 중견기업에 대한 체계적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연구의 시의성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R&D 여건, 수요, 애로조사 등을 실시하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중견기업 R&D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중견기업 R&D 현황 분석

1. 일반현황

우리나라 중견기업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중소기업청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중견기업 현황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매년말에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 조사는 중견 기업 수, 매출, 수출, 고용, R&D, 업력 등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가장 최근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2013년 말 기준 우리나라 중견기업 수는 전년 대비 410개 증가한 3,846개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전체 기업 수의 0.12%에 해당하는 수이다. 또한 전체기업의 수출액, 고용, 매출액에서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전체기업 대비 중견기업 비중

구 분	기업(개)	수출(억불)	고용(만명)	매출(조원)	법인세(조원)	R&D(조원)
	(%)	(%)	(%)	(%)	(%)	(%)
중 소	3,250,485	960	917	1,751	8	11
	99.8	17.1	76.8	42.9	20.8	25.8
중 견	3,846	877	116	629	8	6
	0.12	15.7	9.7	15.4	21.9	12.8
대기업	1,669	3,749	161	1,703	21	27
	0.05	67	13.5	41.7	57.3	61.4
전 체	3,256,000	5,596	1,194	4,083	37	43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한국중견기업연합회(2014)

중견기업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중소기업 및 대기업과 비교하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보다 3백 만개 이상 많지만, 법인세 비중은 중견기업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액에서 중소기업 (17.1%)에 미치지 못하는 15.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견기업의 수출, 고용, 매출, 법인세, R&D투자 중 전체기업 대비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고용(9.7%)이며, R&D투자(12.8%)가 뒤를 이었다.

2. 중견기업 R&D 현황

<표 2> R&D 집약도 구간별 기업수

업종	R&D집약도							
	없음	1.0% 미만	1.0~3.0%	3.0~5.0%	5.0~10.0%	10.0~30.0%	30.0% 이상	합계
전 산 업	2,464	798	289	120	93	68	14	3,846
(비 중)	(64.1)	(20.7)	(7.5)	(3.1)	(2.4)	(1.8)	(0.4)	(100)
제 조 업	713	524	237	92	64	37	8	1,675
비제조업	1,751	274	52	28	29	31	6	2,171

자료: 중소기업청(2014)

2013년 기준 중견기업의 R&D집약도는 평균 0.88%로 나타났다.¹⁾ 이는 중소기업(0.66%) 보다 높지만, 대기업(1.44%) 보다 낮은 수치이며, 전체기업 평균(1.17%)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이다(한국은행, 2014).

R&D 투자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은 2,464개로 이는 조사대상 기업의 64.1%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20.7%의 기업은 R&D 집약도가 1.0% 미만이었으며, 1.0~3.0%인 기업은 7.5%로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R&D 집약도가 낮은 구간일수록 다수의 기업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R&D집약도=R&D투자/매출액

<표 3> 매출액 구간별 R&D 집약도

매출액 규모	산업 전체	
		제조업
1,500억원 미만	1.07%	1.51%
1,500 ~ 3,000억원	0.84%	1.12%
3,000 ~ 5,000억원	0.77%	1.10%
5,000 ~ 1조원	0.93%	1.08%
1조원 이상	0.80%	0.79%
전 체	0.88%	1.09%

자료: 중소기업청(2014)

전산업을 기준으로, 매출액 규모별 R&D 투자를 살펴보면, 매출 1,500억원 미만 구간 기업들의 R&D 투자 비중이 1.07%로 가장 높았으며, 5천억~1조원 규모인 기업이 0.93%로 뒤를 이었다. 제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매출 1,500억원 미만 구간 기업들의 R&D 투자비중이 1.5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1,500억원~3,000억원 규모인 기업으로 1.12%였다. 매출액 1조원 이상의 기업은 0.79%로 R&D집약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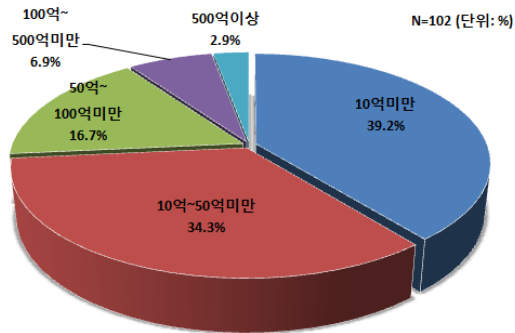
3. 중견기업 R&D 여건²⁾

1) 투자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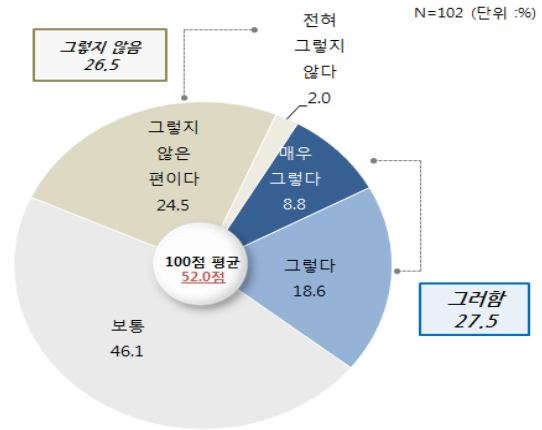
2013년 R&D 투자규모가 10억 미만인 기업이 39.2%로 가장 많았고, 투자액이 높은 구간일수록 기업 수가 적게 나타났다. 500억 이상 투자한 기업은 2.9%에 그쳤다. 현재의 R&D 투자가 적절한지에 관한 질문에 분석 기업의 27.5%(‘매우 그렇다’ 8.8%, ‘그렇다’ 18.6%)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26.5%(‘전혀 그렇지 않다’ 2.0%, ‘그렇지 않은 편이다’ 24.5%)는 부정적인 응답을 하여 긍정적 답변이 약간 우세하게 나타났다.

R&D 투자규모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부정적인 응답률이 높은 집단은 종사자 수 100인 미만 기업(45.5%)과 매출액 500억~1,000억 미만 기업(42.9%)이었다. 반면, R&D 투자규모가 적절하다고 답변한 집단은 종사자수 300~500명 미만 기업(44.0%)과 매출액 3,000억~5,000억 미만 기업(41.7%)이었다.

2) 이하 별도의 출처가 없는 통계 수치들은 2014년 12월에 시행한 연구자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동 조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제조업 중견기업이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리스트 1,675개 중에서 조사대상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기업을 배제하고, 829개를 대상으로 Fax 및 E-mail을 발송하여 총 102개의 유효 응답을 확보하였다(회수율 12.3%). 분석대상 기업은 규모 면에서 100명 이상~300명 미만의 기업이 41개(40.2%)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300명 이상~500명 미만 기업이 25개(24.5%)로 그 뒤를 이었다. 매출액 면에서는 1천억 이상~2천억 미만 기업이 36개(35.3%)로 나타났으며, 2천억 이상~3천억 미만 기업은 18개(17.6%)로 확인되었다.



(그림 1) R&D 투자규모별 기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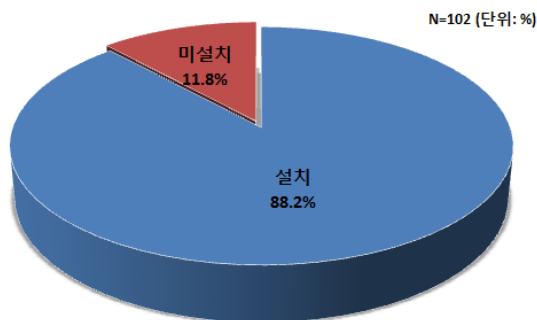


(그림 2) R&D 투자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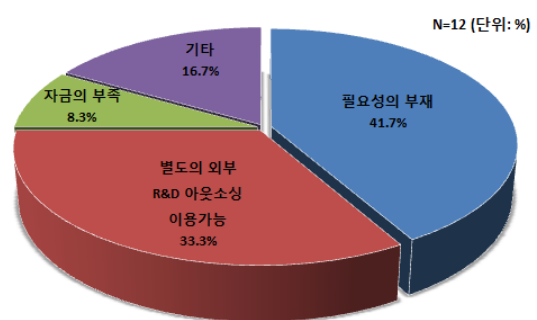
2) 수행조직

연구소와 같은 R&D 전담부서가 설치된 기업은 88.2%로 나타났다.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인 12개 기업은 모두 R&D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었다. 매출액 1,000억~2,00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91.7%, 50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90.0%가 연구전담 조직을 보유하고 있었다. 종업원 수 기준으로는, 300~500명인 기업의 경우 96.0%, 500~1,000명인 기업의 경우 94.7%가 연구전담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100명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63.6%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R&D 전담부서가 설치된 기업 90개 중, 해당 조직의 설립연도가 2000년대인 경우는 32.2%로 가장 많았으며, 1990년대 25.6%, 1980년대 24.4%, 2010년대 11.1%, 1980년 이전 3.3%의 순으로 나타났다. R&D 전담조직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12개의 기업은 그 이유로서 ‘필요성의 부재’를 꼽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5개 기업), ‘별도의 외부 R&D 아웃소싱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4개 기업).



(그림 3) R&D 전담부서 설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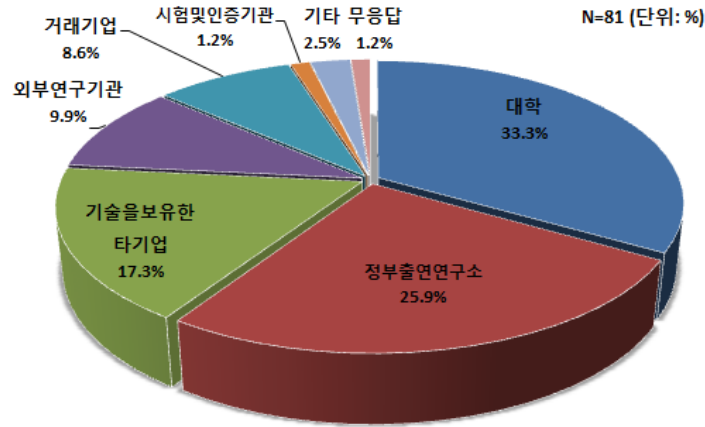


(그림 4) R&D 전담부서 미설치 사유

3) 공동 R&D 경험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R&D를 진행해 본 경험여부에 대해 79.4%의 기업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기업규모별로는 500명 이상~1,000명 미만 기업의 94.7%, 매출액 3,000억 이상~5,000억 미만 기업의 91.7%가 공동 R&D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 R&D의 파트너로는 대학이 3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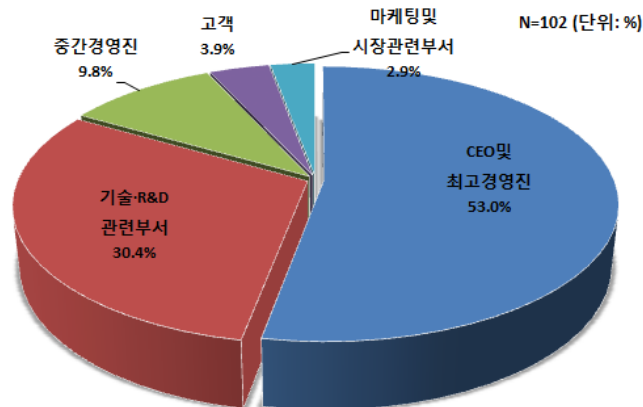
차지하였고, 정부 출연(연)(25.9%), 기술을 보유한 타 기업(17.3%), 기타 외부 연구기관(9.9%), 거래기업 (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 공동 R&D의 파트너

4) R&D 관련 의사결정 주체

R&D 의사결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주체는 CEO 및 최고경영진(52.9%)이었다. 다음으로 기술 또는 R&D 관련부서(30.4%), 중간 경영진(9.8%), 고객(3.9%), 마케팅 및 시장관련 부서(2.9%) 순으로 영향력이 있었다. 한편, 신규 사업 또는 R&D 방향 등에 관한 아이디어는 주로 기술 또는 R&D 관련부서(76.2%)에서 제공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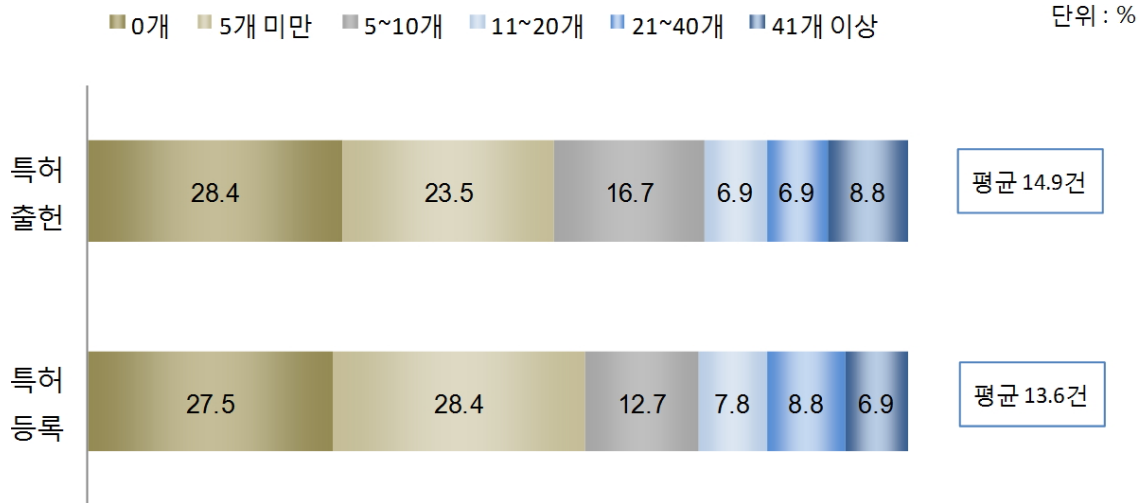
(그림 6) R&D 의사결정 주체

4. 중견기업 R&D 성과

1) 특허성과

조사대상 기업이 최근 3년 동안 출원한 특허의 건수를 조사한 결과, 특허가 전혀 없었던 기업이 28.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5개 미만(23.5%), 5~10개(1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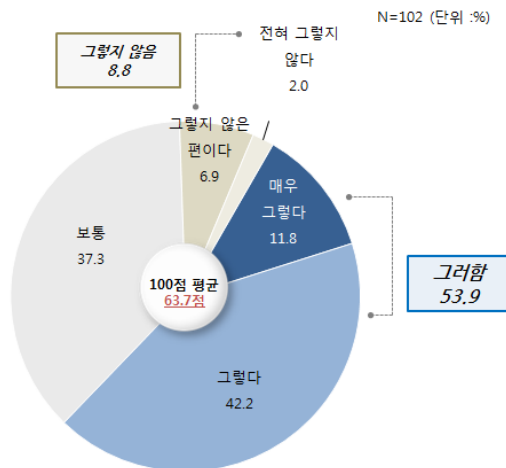
한 특허의 건수는 5개 미만인 기업이 28.4%로 가장 많았고, 0개(27.5%), 5~10개(12.7%) 순의 분포를 보였다.



(그림 7) 최근 3년 내 보유한 특허 건수

2) R&D 성과의 체계적인 관리

R&D 성과 관리에 대하여 분석대상 기업의 53.9%(‘매우 그렇다’ 11.8%, ‘그렇다’ 42.2%)는 ‘표준 프로세스 하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8.8%(‘전혀 그렇지 않다’ 2.0%, ‘그렇지 않은 편이다’ 6.9%)의 기업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대체로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체계적으로 R&D 성과를 관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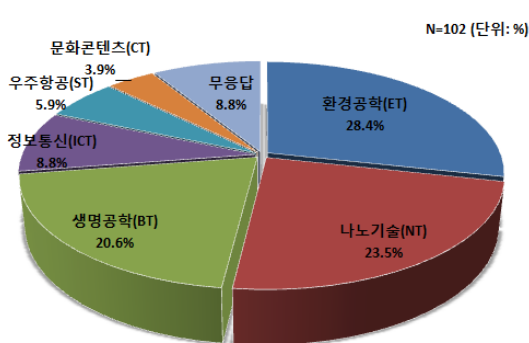
(그림 8) 체계적인 R&D 관리 여부

5. 중견기업 R&D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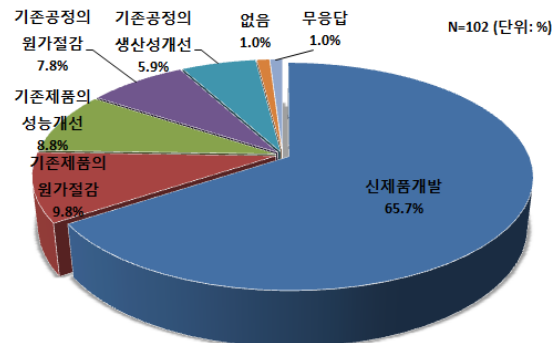
현재 R&D가 가장 필요한 기술분야로 환경공학(28.4%) 분야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나노기술(23.5%), 생명공학(20.6%), 정보통신(8.8%), 우주항공(5.9%), 문화콘텐츠(3.9%)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업경영 관점에서 필요한 R&D의 성격을 살펴보면, 신제품 개발 R&D가 65.7%의 높은 비중으로 집계되

었다. 기존제품의 원가절감(9.8%)이나 성능개선(8.8%), 기존 공정의 원가절감(7.8%)이나 생산성 개선(5.9%)의 필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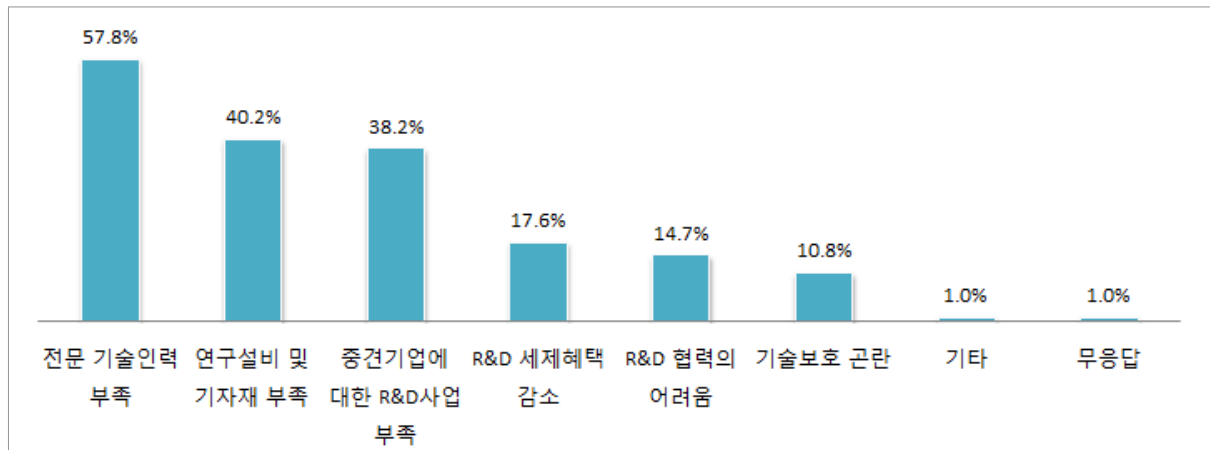
(그림 9) R&D 필요분야



(그림 10) 필요 R&D의 성격

6. 중견기업 R&D 애로

분석기업의 57.8%는 전문 기술인력 부족 현상을 R&D와 관련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밖에도 연구설비 및 기자재 부족(40.2%), 중견기업에 대한 R&D사업 부족(38.2%) 등이 애로사항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R&D사업 부족과 관련하여, 분석기업의 38.2%는 최근 3년간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1) R&D 애로사항(중복응답)

IV. 중견기업 R&D 지원 정책 현황 및 평가

1. 국내 주요 중견기업 지원정책

지금까지 정부는 중견기업을 세계적 강소기업, 또는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먼저, 2010년부터 현재까지 크게 세 번의 종합대책이 발표되어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의 근거가

되었고, 관련 사업 추진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첫째,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10.3.13.)」은 제51회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된 것으로, 경제의 성장과 활력을 높이고, 세계 新산업질서 형성에 대응할 주역으로서 중견기업을 지목하고, 이들을 세계적 전문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일련의 전략을 담고 있다. 이 전략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이분법적 정책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중견기업을 경제의 핵심주체로 인식하고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최초의 종합적인 정책 방안으로서, 이후 중견기업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지원제도가 확립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 전략을 통해 중견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확대와 지원사업 확충, 특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중견기업 지원사업인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의 추진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어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중견기업 3000+프로젝트(’12.8.9.)」는 제130회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된 것으로, 중견기업이 이끌어가는 무역 2조 달러 경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육성전략이다. 본 전략에서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혁신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투자, 시스템, 지원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R&D 투자의 대폭 확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셋째,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13.9.17.)」은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것으로, 중소기업에서부터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일련의 종합대책이다. 이 안에서도 중소기업이 정부지원에 안주하려는 ‘피터팬 증후군’ 극복이 최우선 과제로 논의되었다. 또한 중견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상기 세 건의 종합대책과 연계되어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는 종합지원 프로그램과 개별 부처별 정부 R&D 사업, 조세·금융부담 완화 제도, 중견기업 특별 온렌딩 제도 등이 시행되었다.

먼저, 중견기업과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정부의 종합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월드클래스300이 있다. 2011년 2월부터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세계적 수준의 기업 300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목표 시한이 최초 2020년에서 2017년으로 앞당겨졌다.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기술개발, 해외진출, 금융 등 종합패키지를 지원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 지원 대상으로서, 제조업·SW 분야 매출액 4백억(SW 1백억)~1조원 수준의 중간규모 기업 중, 3개년 R&D 집약도가 2% 이상이거나, 5개년 매출성장률이 15%이상인 기업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책임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KOTRA, 산업기술진흥원, 기보 등 다양한 기관이 분업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부 R&D 예산도 꾸준히 투입되고 있는데, 2015년에는 전년 대비 28.4% 증가한 830억원이 편성되었다. 또한 프로젝트의 수혜 기업도 2011년 30개사에서 2012년 67개, 2013년 100개, 2014년 156개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둘째, 주요 정부 부처에서 중견기업을 주 대상으로 명시하여 정부 R&D 사업들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청의 중소·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 산업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각각 추진하는 글로벌전문기술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간에 전주기적이고 다각적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 기업의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상호 간 동반성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15년 27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은 2015년 21억원이 투자될 예정인 산업부 R&D 사업으로, 각 기업에 고급연구인력을 공급하고, 인력활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술인력수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은 주력 및 신산업, 에너지자원순환·녹색기술, 신재생·전력·원자력, 정보통신·정보화 등 4개 분야에 있어서 기술혁신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핵심 및 사업화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에는 산업부와 미래부가 각각 1,758억원, 310억원³⁾을 투자할 예정이다.

셋째, ‘조세·금융부담 완화 제도’는 3년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이후 추가적인 5년의 부담완화 기간을 도입하여 중소기업 졸업기업의 최저한세율과 R&D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의 운영을 통해 가산보증료가 조정되고, 기업은행을 상대로 금융거래 조건이 개선되는 등 중견기업의 조세·금융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정책의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제도가 개정되었는데, 「조세특례제한법」과 동법시행령 및 운용기준이 개정되었다(’12.1.1.). 또한 「산업발전법」시행(’11.7.1.) 이후 법적 개념에 적합하게 기업은행의 내부 지침이 개정되었다. 이를 통해 중견기업의 분류 기준이 신설되었으며, 중견기업 여신운용 기준이 제정되어 중소기업과 동일한 여신전결권, 여신 금리 적용, 우량기업 선정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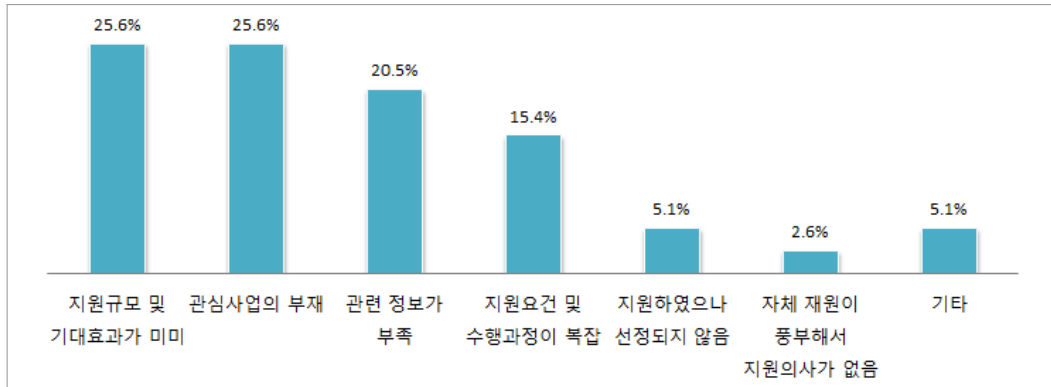
넷째, ‘중견기업 특별 온렌딩(On-lending) 제도’는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자금을 활용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장기 설비투자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온렌딩 자금은 원화, 외화, 특별 등 크게 세 유형으로 구별되는데, 여기서 특별 온렌딩은 다시 신성장동력산업, 녹색산업, 수출기업, 지방기업육성, 그린팩토링, 동반성장 등으로 나뉘어 유형별 중소·중견기업에게 최대 1,000억원까지 대출이 이루어진다. 해당 제도가 시작된 2009년 이후 2014년 5월까지 5년간, 중소기업 대상으로 17조 4,885억원, 중견기업 대상으로 5조 7,020억원이 대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금융신문, 2014).

다섯째, ‘중견기업 전용 펀드 조성’은 정책금융공사를 중심으로 약정 금액의 50% 이상을 중견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기존 운영 실적으로는 투자기간 3년의 ‘Frontierchamp 2010-1 ~ 7호(총 7개 펀드)’를 총 1조 2천억원 규모로 결성하여, 2011년 말까지 19개 기업에 4,978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지식경제부, 2013).

2. 기존 중견기업 R&D 정책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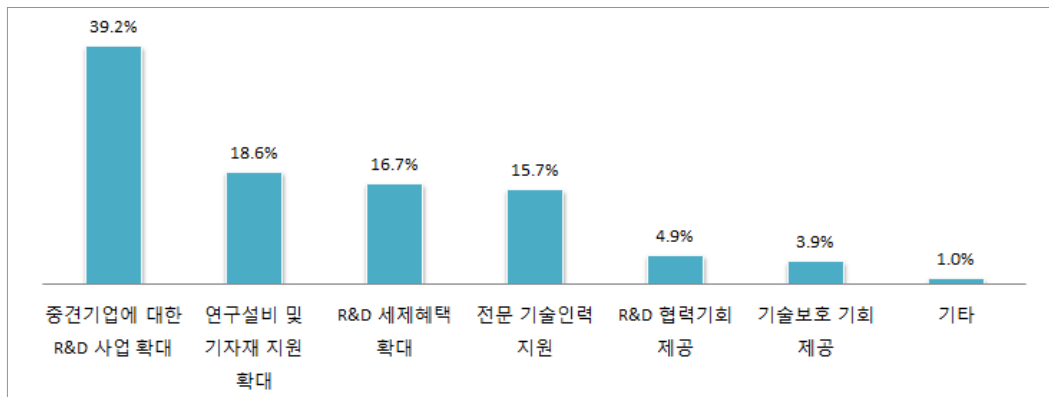
지금까지 추진한 중견기업 관련 정부의 종합대책 및 관련 정책들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전 부처가 협업하여 성과를 달성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중견기업 관련 이슈를 도출하고 제도적인 정비를 거쳤다는 점에서 최근 5년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로 전환하는 과도기에도 중견기업 관련 정책적 기조들이 일정부분 일관성과 연속성을 보이며 전개되었던 것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수요자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견기업의 CEO 또는 임원을 대상으로 중견기업 지원정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응답기업의 61.8%는 최근 3년 동안 R&D 관련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기업들의 불참사유로는 ‘지원규모 및 기대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라는 응답과 ‘관심사업의 부재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2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보부족(20.5%), 지원요건 및 수행의 복잡함(15.4%)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3) 미래부의 글로벌전문기술개발(정보통신·정보화) 사업은 유사·중복사업 개편에 따라 2015년부터 차세대이동통신서비스활성화기반구축사업과 함께 ICT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통합되었으며, 2015년 예산 310억원은 통합된 사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림 12)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정부의 지원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서 중견기업에 대한 R&D 사업의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39.2%). 또한 연구설비 및 기자재 지원(18.6%), R&D 세제혜택 확대(16.7%) 등을 요구하는 기업도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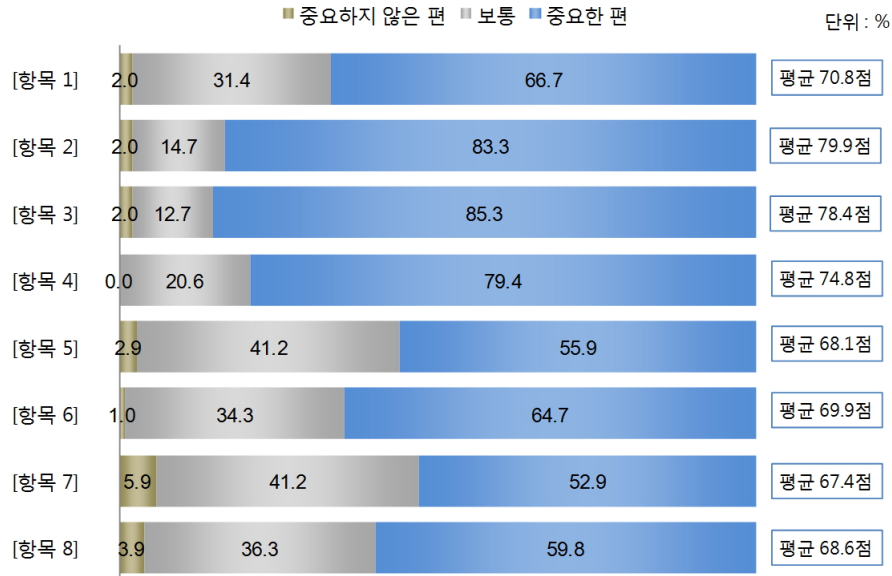


(그림 13) 정부지원이 가장 시급한 분야

보다 구체적인 수요자 중심의 중견기업 R&D 정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8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들 방향에 대한 중요도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조사하였다. 8개의 정책 방향은 아래와 같으며, 선행연구와 최근의 정책적 이슈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 [항목 1] 각 부처별로 계획된 R&D 지원사업
- [항목 2] R&D 지원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 [항목 3] 지원대상 선정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 [항목 4] 지원규모 및 기간의 적정화
- [항목 5] 기술사업화 연계 지원 체계
- [항목 6] 산업(분야)별 육성전략 및 지원방향 등의 로드맵
- [항목 7] 글로벌 시장진출(진입) 지원 체계
- [항목 8] 중소기업 미래 R&D전략 및 가이드라인을 위한 중견기업 기술 로드맵

분석결과, 8개 항목 모두가 50% 이상의 중요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목 2] R&D 지원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는 평균 79.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반면 ‘[항목 7] 글로벌 시장진출(진입) 지원 체계’는 67.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가 나타났다.



(그림 14) 주요 정책방향별 중요도

이처럼 중견기업 R&D 지원 정책은 소기의 성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성과를 평가할 때, 몇 가지 비판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중견기업 고유의 특수성을 감안한 정책이 여전히 부족하다. 중소기업과 다른 중견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지만,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대부분의 사업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례로 대표적인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월드클래스300도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히 중소기업과 다른 중견기업의 차별적 혜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책금융공사의 중견기업 특별 온렌딩 제도도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출한도를 5배 가량 높게 책정하고 있지만, 한도 외의 내용들은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중견기업 전용 펀드도 Frontierchamp 2010-1~7호 이후로는 운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후 2013년 8월 출범한 성장사다리펀드와 같이 ‘중소·중견기업 전용 펀드’ 형태가 추진되고 있다(중소기업뉴스, 2014).

둘째, 중견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려는 방향성에 있어서 기업 현장과 기대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 중견기업 관련 대표적 프로그램인 월드클래스300은 사업목표 자체가 세계적 수준의 강소기업 육성으로서, 글로벌화를 위한 시책에 많은 역량과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또한 산업부의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추진방안’에서도 대외지향성을 바탕으로 광활한 세계시장에 집중하는 기업을 최종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에 전문역량을 갖춘 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은 매우 바람직하고, 이를 촉진할 필요가 있지만, 실질적인 경영환경에서는 해외진출을 원하지 않거나, 대기업과의 납품관계 등을 고려하여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기대불일치가 발생하면서 정책효과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경란(2014)은 중견기업의 금융거래 특성을 분석한 연구에서, 규모는 중견기업이지만 경영행태는 아직까지 내수위주의 중소기업형인 기업이 다수 존재하며, 수출기업이라 하더라도 대기업 납품업체로 자체적인 독립 수출역량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보다 중견기업이 수출에 적합한 기업군일 것이라고 막연하게 규정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8개의 정책 방향 항목 중에서 ‘글로벌 시장진출(진입) 지원 체계’는 중요도 면에서 가장 낮은 67.4점을 기록하였다(최고점수 항목 79.9 점). 또한 현재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사업운영방향에 관한 질문에서도 ‘현 사업영역에서 해외시장 진출’은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와 신규사업의 개발에 비해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높은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기업의 성장단계에 있어서 내수를 통해 내실을 기하고 점진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등 보다 안정적인 성장 패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 형성기인 현 시점부터 지나치게 글로벌 진출 사업 위주로 편성하는 것은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

셋째, 정책에 대한 추적관리가 다소 미흡하다. 그동안 중견기업 관련 정책은 짧은 시간을 고려할 때, 기조와 세부내용들이 상당부분 일관성 있게 전개되어 왔지만, 일부 내용은 체계적인 사후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중견기업 R&D 비중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중견기업이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별도의 통계로 산정되지 않고, 사후 조사·분석 과정에서도 중소기업과 통합된 수치로 산입되면서 중견기업 관련 R&D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피드백이 어려운 실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진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2014 회계연도부터 중견기업을 별도의 통계로 항목화하기로 했지만, 그 밖의 대부분 부처 정책과 예산편성 프로세스는 여전히 중소·중견기업을 통합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명확한 사후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V. 결론

1. 요약

중견기업에 대한 법적 개념 정의가 체계화된 이후 약 4년의 시간이 흘렀다. 중견기업 R&D 정책의 기획, 추진,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지만, 소기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현재가 중견기업 R&D 정책 추진의 초기인 점을 감안할 때, 올바른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향후 국가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중견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과제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견기업 R&D 투자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 지원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선행문헌 검토, 설문조사, 국내외 정책사례 분석 등을 시도하였다. 먼저, 선행문헌 검토를 통해 기업의 성장경로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다수의 연구자들은 중견기업 관련 정부 R&D 사업과 인력지원, 자금지원, 조세지원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도의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등 중견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주문하였다.

다음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중견기업의 R&D 투자 실태와 현 주소를 진단하고 정책적 요구사항을 확인하였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대기업에 비하여 R&D 집약도가 낮고, 급진적 혁신에 대한 의지 보다는 내수 및 현 시장에서의 점진적 개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어려움은 R&D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R&D 의사결정 및 추진에 있어서 협업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수의 기업은 정부 R&D 사업의 확대를 주문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지원 배제를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R&D 사업 참여에 따른 복잡한 행정절차를 큰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었다.

국내의 중견기업 관련 R&D 정책은 2010년 3월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 발표로 부터 2011년 3월

「산업발전법」 개정, 2012년 8월 ‘중견기업 3000+ 프로젝트’ 발표, 2013년 9월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발표, 2014년 7월 「중견기업특별법」 시행 등 단기간에 숨 가쁘게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중견기업 대상 R&D 사업이 신규 추진되었고, 중견기업 전용 펀드, 금융프로그램 등이 기획되었다. 하지만 아직은 사업의 수가 부족하고, 중소기업과 함께 지원 대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중견기업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2. 중견기업 R&D 정책 방향 제언

중견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R&D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견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구별을 시도하여야 한다. 현행 혼재되어 있는 사용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라는 단어는 정책수혜 대상자의 차별적 특성에 대해서 간과할 소지가 있으며, 개념의 명확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지양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차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혼재될 수 있는 영역과 고유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정부사업 기획 과정에서부터 지원 대상 기업을 명확히 표기하여 부처 간 상호 이해를 돕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기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견기업 관련 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최신 기업현황 데이터 유지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중견기업 맞춤형 정책의 입안과 실행을 위한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되므로, 현행 연말에 발표되는 수준보다 더욱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중견기업 지원 R&D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견기업 성장 단계별로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월드클래스300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참여 가능한 기업의 수가 제한적이며, 중견기업 전용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이며, 기업 수 대비 고용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들을 위한 전용의 R&D 지원 사업이 개발되어야 한다. 산업분야별, 성장단계별 중견기업 특성을 반영한 미래형 적정기술 확보를 위한 특성화 기술개발 전략 및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중간자적인 위치인 중견기업의 전략적 포지셔닝 확보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룰메이커(Rule Maker)가 될 수 있는 우월적 경쟁력 확보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중견기업 특화 유망기술에 대한 기술로드맵을 구축하여, 미래 중견기업의 R&D의 전략적 추진방향과 성장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중견기업 R&D 지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가중점과학기술전략로드맵을 물론,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부처별 기술로드맵과 연계되면서도 중견기업만의 차별적 특성에 부합하는 전용 로드맵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중앙·지역 예산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기술 로드맵 상에 재원 투자 계획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중견기업 R&D에 대한 지원확대를 감안하여, 예산의 과도한 분산과 유사 중복투자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치밀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며, 지원원칙을 사전에 명문화해야 한다.

셋째, 기업별 특성에 부합하는 R&D 지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다수의 중견기업이 대기업에 종속적인 납품위주의 영업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R&D 지원이 대기업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형태로만 전용되지 않는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다각도의 검증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중견기업 실태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선행되어 보다 세분화된 통계를 획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기획의 정교함을 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원프로그램은 글로벌 강소기업 혹은 전문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만큼,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없고, 혜택을 받는 기업만 계속 혜택을 받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같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중소기업 졸업연수와 업종, 해외시장환경 및 수출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인 맞춤형 설계를 추구해야 한다.

넷째, 우수 중견기업의 정부 R&D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세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분석기업의 38.2%가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으며, 불참기업의 15.4%는 지원요건 및 수행과정의 복잡함을 불참의 원인으로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불편함은 중견기업의 혁신성과 제고라는 R&D 지원사업의 기본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수요자 관점의 프로세스 개선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사업 단계별 서식의 간소화를 추진하여 중견기업의 참여확대를 유도하고, 정부사업 참여에 대한 업무 부담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R&D 목표와 방향에 있어서 유연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달리 자원과 역량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R&D 추진 시 발생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창의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즉, R&D 목표 및 추진방법에 대한 유연성을 인정하여, 향후 급변하는 기술 및 시장 환경 등에 따라 기술개발 목표 및 방법의 적절한 수정·보완이 용인되어야 한다. R&D 과제의 목표 및 방법에 있어서 일부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1차적으로는 전담기관의 총괄책임자와 1차적으로 협의한 후, 2차로 책임부처, 전담기관, 연구책임자가 공동으로 구성한 협의체를 거쳐 최종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견기업 간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적 아이디어가 발생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중견기업 간 협력 R&D 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중견기업-대기업 간 멘토링을 독려하여 성장 사례에 대한 확산을 촉진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강철구 (2009), 「일본 중견기업의 성장이 주는 시사점」, 일본연구 2009-01, 서울: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기업연구센터.
- 고성진, 김갑수 (2009), 「중견기업의 R&D투자 실태와 투자유인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연구보고서)」, 서울: 한국산업기술재단 기술정책연구센터.
- 관계부처합동 (2013),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 국회예산정책처 (2014), “벤처 창업 지원 정책의 주요 쟁점과 개선과제”, 사업평가14-07,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김군수, 이상훈 (2013), 「중견기업의 성공요인과 5대 핵심과제」, 이슈&진단 No.115, 경기: 경기개발연구원.
- 김병순 (2011), “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전략과 경영자의 역할”, 「대한경영학회지」, 24(3) : 1539-1564.
- 김현중 (2009), “혁신을 통한 성장: 중견기업 R&D정책”, 「2009 기은연구」, 가을호 : 7-33.
- 노창호 (2013),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정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단지 Issue & Report, 2013-08 제6호, 대구: 한국산업단지공단.
- 대한상공회의소 (2014), “중소기업 졸업기업 경영실태 조사”, 조사보고서.
- 박병춘 (2013),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 지원 정책: R&D 지원 정책 및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1(2) : 1-27.
- 박찬수 (2012),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STEPI Insight 제92호, 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박정원 (2013), “중견기업의 특성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산업통상자원부 (2013),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추진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13-21-3.

- 유승균, 박문서 (2010), “중견기업의 글로벌마케팅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7(2) : 5-23.
- 유승균, 홍승기 (2014), “유럽 주요국의 중견기업 사례연구”, 「통상정보연구」, 16(1) : 185-203.
- 조영삼 (2009), “중견기업 육성 논의의 현황과 과제”, KIET산업경제 2009-12, 세종: 산업연구원.
- 중소기업뉴스 (2014), “금융위, 올 중소·중견기업 지원 전용펀드 4400억 조성”, (2014.04.02.).
- 중소기업청 (2014), “중기청, 중견기업 현황 발표(’13년말 기준)”, 보도자료.
- 지식경제부 (2013),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지식 경제」, 정책자료집1: 산업·무역편, 경기: 지식경제부.
- 한국금융신문 (2014), “온렌딩, 中企대출로만 20조 돌파 눈앞”, (2014.06.16.).
- 한국은행 (2014), 「2013년 기업경영분석」, 서울: 한국은행.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14),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
- 현용수, 이병헌, 이진식 (2013), “중견기업의 기술획득전략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8(3) : 1-16.
- Almus, M., and Czarnitzki, D. (2003), “The Effects of Public R&D Subsidies on Firms Innovation Activities: The Case of Eastern Germany”, *Journal of Business and Economic Statistics*, 21(2) : 226-236.
- Audretsch, D. B., Link, A. B., and Scott, J. T. (2002), “Public/Private Technology Partnerships: Evaluating SBIR-supported Research”, *Research Policy*, 31(1) : 145-158.
- Duch, N., Montolio, D., and Mediavilla, M. (2005), “Evaluation of Public Subsidies Oriented to Firms Performance: A Quasi-experimental Approach”, Universitat de Barcelona, Working Paper
- Hall, B., and Reenen, J. (2000), “How Effective are Fiscal Incentives for R&D: A Review of the Evidence”, *Research Policy*, 29(1) : 449-469.
- Simon, Hermann (1996), *Hidden Champions. Lessons from 500 of the World's Best Unknown Companies*,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Simon, Hermann (2012), “Hidden Champion Vanguard for Globalia”, University of Economics Prague, <http://km.vse.cz/wp-content/uploads/2012/05/2H01X013-prag-hc-090312.pdf>.